
필리버스터 발언 참고자료

〈필리버스터 발언 구성〉

〈순 서〉

- 도입
-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 국민통합 - 대통령 취임사
- 검찰총장 찍어내기
- 해수부 공무원 피격
- 월성1호기 불법 폐쇄 및 탈원전
- 코로나 19 대응
 - 초기대응 실패
 - 마스크 대란
 - 정치방역 논란
 - 백신확보 문제
- 부동산 정책 실패
- 사법부 장악
- 문제 많은 수사 및 재판
- 문제 많은 법안 처리 (공수처법 등)
- 4강 외교 문제
- 북핵 관련
- 국가부채 증가

<도 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 시대 국민의 삶 미래세대의 삶까지 모두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역사는 21대 국회를 엄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정말 4류인 한국 정치를 1류 정치로 바꾸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틀을 여기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입법에 대한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받은 입법부이며,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그 국회를 구성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삼권분립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통치구조가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나 하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 하듯 법안 통과시키는 거수기, 통법부가 아닙니다.

과거 국회가 ‘통법부’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야당과 국민은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고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0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대차3법을 처리했던 그 날, 우리 국회는 다시 한번 통법부로 전락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만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 전체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여당의 폭거를 통법부라며 항의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사실을 통해 의석 수만 믿고 민주적 절차없이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통법부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섯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국회는 또다시 통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통법부가 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 국회는 언제까지나 백년하청(百年河淸)이어야 합니까?

국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인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인데, 우리나라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였던 고 권영성 교수님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할 뿐, 그 이외의 어떠한 지시나 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의원은 또한 선거구민이나 소속정당의 이익보다는 국가 또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진다. 그런 까닭에, 의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여론을 존중하여야 함은 물론, 국가 또는 전체국민의 이익과 소속정당의 이익이 대립할 경우에는 전자의 이익을 우선시킬 정치적 의무가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전체국민과 소속정당의 이익이 대립할 경우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정당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국민의 이익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야당과 국민은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은 국회의 수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통령이나 소속 정당·정파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한 토론과 심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반대하는 국민여론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입법독재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재촉하자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기습 상정하여 우리 ‘국민의힘’ 반대토론 요청조차 무시한 채 기립표결로 7분 만에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오히려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2021년 신년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켜세웠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안건조정회의에 여당쪽 의원을 야당몫으로 넣고 그것도 4개 안건은 조정도 없이 날치기하였습니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제한토론을 막지 않고 야당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더니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자 코로나를 핑계로 갑자기 강제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무당적인 국회의장까지 표결에 동원된 상황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지적에도 막무가내입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에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눈치보기 바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 총장님”이라며 치켜세우고,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해 놓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자 불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쫓아낼 궁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꼭두각시들을 내세워 판사들도 아니라는 데 ‘판사사찰’이라는 누명을 덮어씌웁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가 희대의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브로커들이 청와대 내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직원들 내부모임에 참석해 함께 어울렸습니다. 사기극의 주범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로비를 하고 다녀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대통령은 사과 한번 없었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할 뿐입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우리 해수부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청와대 하명에 의한 명백한 표적수사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수사도 이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사체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기겠다며

4년전 결론난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국회의 세종시 이전도, 위헌의 문제해결도 없이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두렵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특정 정파가 소유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3석이라는 소수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아무리 저항해 봤자 거대여당의 폭거에 도저히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국가 흥망은 필부유책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나서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의 폭주를 제지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이 법은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과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서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는데 90일이 지나도록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초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90일 기간이 종료된 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법안심사소위에서라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외교통일위원회는, 또 법안소위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마는 전원합의제 관행을 유지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적 일방주의와 결합이 되면 소수의 의견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폭거를 막고 소수의 권리도 보호하고 합의하는 것은 국회가 오랜 시간 지켜 온 의회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일 뿐이고 그것이 언제나 정당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야당의 생각과 주장을 무시하고 토론과 타협이 없는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는 견해와 사상을 발표하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 26일 전원위원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나 또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같은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침해가 되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과거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3월 29일 대법원은 위험 발생 방지를 규정하고 있는「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일정한 조건과 범위에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선고 2015다247394) 한 바 있어 굳이 법개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건 법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국회가 또다시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토론과 합의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문화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십년간의 남북관계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최근에 있었던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를 볼 때,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정말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까지 불에 태우고 훼손하는 천인공노한 일을 저지르고, 또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의 도발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북한을 대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참히 짓밟는 사건일 뿐입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16년 연속 통과되었

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북전단 문제를 이유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들을 방관하지 않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든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만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현행 경찰집행법 등을 가지고도 또 행정력을 동원하면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서 이 법에다 전단 처벌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입법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간의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한 것을 뒤돌아보면 결국은 경찰이 동원 돼서, 우리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7 판문점선언에도 나왔던 것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이 입법을 하라고 하니 우리가 입법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남북관계에서 우리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사랑하고, 김정은의 세습독재를 증오한다면 이런 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고,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북한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그 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실현하신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북한도 언젠가는 민주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오신, 자칭 민주화의 투사라는 분들이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인권유린 행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에서 김정은의 세습 정권은 가해자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피해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입니다.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은 만장일치 합의제로 표결 없이 처리됩니다.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이런 법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美 의회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인가”,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국무부 워치리스트(watchlist·감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한반도 민주화와 반민주화의 견지에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이 법안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옳은 걸음 일까를 심사숙고해주길 당부합니다.

<국민통합 - 대통령 취임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대체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국민통합’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대통령(大統領)이라는 단어에서 통(統)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느리다’는 뜻으로 ‘통치’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합치다’는 뜻으로 ‘통합’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크게 통치하려는 마음이 강한 분일까요, 크게 통합하려는 마음이 강한 분일까요?

취임사를 살펴보면, 처음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는 통합에 대한 의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곳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행사에서 선서와 함께 취임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희망과 기대감을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때 대통령께서 읽었던 취임사, 무슨 말이 적혀있는지 벌써 다 잊어버린 듯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때의 심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취임사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역사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 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

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

겠습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심금을 울리고, 정말 국민들 마음에 희망을 주는 명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당대의 명문장, 명연설이 희대의 사기문장으로 바뀌는 데는 채 몇 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맞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풍전등화의 신세가 된 나라가 되었으며, 우리 모두의 나라가 아니라, 정권을 지지하는 그들만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권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광장대결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총칼만 들지 않았지 내전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부터 최근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이르기까지, 통합과 공존은 온데 간데 없고 내편이 한 일이면 무조건 정의가 되는 진영논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약속이 얼마나 위선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 정권에 대해선 적폐로 규정해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자기편의 온갖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검찰 탕’으로 돌리는 현 집권세력의 뻔뻔스러움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10여 년간 지역갈등을 겨우 봉합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과거 정부 결정을 뒤엎고 또다시 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이 무책임해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행정부와 청와대, 공기업, 심지어 사법부까지 자격없는 무능한 코드인사로 자리를 채웠지 않습니까?

집권초기 1기 내각 구성 당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3명이 5대원칙 배제에 포함되었습니다. 4명은(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결국 후보사퇴까지 했습니다.

애초에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만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문판의 카페지기 경력과 학원 상담실장 경력을 가진 사람이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에는 대선 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의원을 임명하여 창립 이후 최초로 정치인이 임명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에도 역시 관련 경력은 전혀 없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던 최창희 대표를 낙점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을 모두 여당 의원에게 맡겨 공정성 시비도 일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직인사를 전리품인 것처럼 나눠먹고서 공정한 인사, 삼고초려를 얘기했으니,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또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 조국 사태, 법을 무시하는 법무부 장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 등 수많은 잘못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들은 소위 적폐사건 수사 때,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로 공소가 제기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파렴치범이 되고 인격살인을 당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실세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사실 공표금지, 비공개 소환을 강력히 시행한 데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까지 정하여 검찰수사를 껌껌이로 만들면서 시시때때로 피의사실 공표죄 운운하며 검찰수사를 겁박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갈등을 부채질한 것도 대통령이었습니다.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전쟁 공훈자로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까지 받은 인물을 대통령이 “국군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대통령이 취임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 문재인 정권만큼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정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다 못해 찢겨져나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장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면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야당 탓만 하면서 진영논리에 빠져 갈등과 대립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 적폐수사 때는 환호, 현 정권비리 수사하자 찍어내기 시작

이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시절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할 때는 얼마나 잘 한다며 환호를 질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하여 검찰총장에까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 정권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고 있으면 응원이라도 해 주셔야지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의 칼날이 전 정권의 정적을 향할 때에는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칭송을 하다가 그 칼날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니까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검찰이라며 찍어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추미애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법천지의 장관을 임명하고, 검찰의 주요 요직에는 현 정권의 친위대로 구성하여 방패막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자행된 불법·부당한 사례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적인 인사권 전횡 사례들입니다.

- ①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월 3일 취임하자마자,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해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인사를 단행

검찰청법 제34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음.

그 결과 조국일가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사건 지휘자인 한동훈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 사건을 지휘한 박찬호 대검공공수사부장 등이 모두 한직으로 쫓아냄.

대신 그 자리를 이성운 중앙지검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 친문 인사들로 모두 채움.

- ② 또 1월23일에 있었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감찰무마수사 중이던 동부지검 차장검사, 청와대 선거개입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 등 모두 교체하여 사실상 권력비리 수사팀을 해체함.

- ③ 가장 심각한 인사권 전횡 사례는 ‘판사 사찰’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임.

오죽했으면, 법무부 검찰위원회에서 조차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등이 모두 부당”하다고 권고를 했겠느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치 명령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라며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 내림.

두 번째로 부당하게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 ① 추미애 장관 직전까지 66명의 역대 법무부장관 중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초대 이인 장관과 천정배 장관 뿐이었음.

그런데 추 장관은 벌써 두 번이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음.

- ② 특히 두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는 사기꾼의 말만 믿고 라임로비 수사에서 배제한 조치는 실정법 위반 행위이며 직권남용죄를 꼭 물어야 함.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지휘권을 박탈한 근거였던 이른바 김봉현 옥중폭로는 검찰의 수사로 대부분 거짓임이 밝혀졌음.

세 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공작과 다름없는 불법적인 감찰을 해 왔습니다.

- ① 추미애 장관의 핵심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소위 ‘판사문건’을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전달하고, 조국이 임명한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은 법무부에서 이를 넘겨받아 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 담당 검사에게 제보한 후, 이를 다시 건네받아 윤 총장을 형사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음.

- ②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소위 ‘권언유착 사건’(또는 채널A 사건) 역시 한편의 공작 드라마를 보는 듯 했음.

MBC가 처음으로 단독보도한 이 사건은,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회유 및 협박하여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음.

이를 빌미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범죄혐의를 씌우려고 했고, 심지어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시켰지만 아무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음.

채널A 기자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강요미수만으로 구속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사가 기록에도 없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스스로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고백하기도 함.

심지어 공영방송인 KBS, MBC를 동원해 편파적인 검언유착 보도를 했지만 결국 KBS는 오보로 인해 사과방송까지 하게 되었음.

이미 1월에 추 장관이 단행한 좌천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던 한동훈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번 더 좌천되기도 했음.

당시 압수수색을 나갔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를 독직폭행하고도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을 뿐만아니라 규정과 달리 직무정지도 되지 않은 채 활개치고 있음.

장관 말만 잘 들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승진하고, 장관에 맞서면 죄가 없어도 좌천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음. 하지만 정진웅 차장은 결국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었고, 곧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임.

추 장관은 이후 한 검사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진천본원으로 전보 조치하면서 감찰까지 실시함.

용인 분원에 있을 때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 출근 후 연구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권고사항 따라 정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했다고 하는데, 노골적인 좌천인사도 모자라 ‘뭉든 하나만 걸려라’는 식의 꼬투리잡기 감찰까지 한 것임.

- ③ 추 장관은 10월 27일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의뢰를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지 확인하라”며 감찰을 지시 이에 당시 담당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A4용지 4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함.

④ 추 장관은 11월 17일 류혁 감찰관도 모르게 공문과 함께 감찰관실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요구함. 대검에서는 공문을 뜯지도 않고 돌려보냈음.

이로 인해 노골적인 총장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렇듯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수사지휘권·감찰권을 전례없이 마구 남용하면서까지 오로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권력에 취해 기고만장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전횡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추 장관은 지금도 윤석열 총장을 기어이 징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은 6가지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음에도 기어이 징계위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징계사유 6가지와 이에 대한 반론>

① 재판부 불법사찰 관련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실시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07.24. 선고 96다42789)에 의하면 법적으로 사찰이 되기 위해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임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은 존재하지 않았음

판사성향 등에 대한 합법적 정보수집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며, 대한변협에서 우수법관을 선정할 때도 세평조사를 통해 하고 있음

인사혁신처 역시 국가예산으로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를 사 들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의해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나 유료인물정보의 구매는 본인 동의없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이자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도 "그게 왜 사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기소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관의 성향과 평판을 수집한 것뿐"이라고 평가했음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사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의 경우, 추 장관이 근거로 이야기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에는 정작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25. 경향신문 단독보도)

②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JTBC에서 변희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였기에 검사윤리강령위반)

당시 변희재는 이미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에 넘겨진 상태였고, 당시 윤석열 지검장은 홍 회장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했음

특정 교류가 징계사유가 되려면 부정목적성을 띄어야 하는데, 접대나 청탁과 같은 부정한 내용이 증명된게 없고, 단순히 '만났다'라는 사실관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는 물론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수준

③ 감찰 방해 관련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음)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대검 규정에 따르면 이런 논란이 생길 경우 인권부 관할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게다가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할 것인지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④ 감찰정보 유출 논란 (윤석열 총장은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이게 문제라면 한동수 본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법무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윤총장을 상대로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감찰개시 사실 등을 공표한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닌가?

⑤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 (대검 국감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여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공무원 징계사례 전체를 뒤져봐도 이런 징계 사유는 전례가 없음. 애초에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출마를 권유한 적도 있지 않은가?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은 분명한 관심법적 해석이자 관심법적 추측이고 이런 추측을 통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⑥ 법무부 감찰 불응 논란 (법무부 감찰에 대해 일정협의를 거부,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 거부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불응하여 감찰규정을 위반)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감찰이었음. 박은정감검찰담당관은 직속상관인 류혁감찰관도 모르게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착수'를 통보

더구나 대면 감찰조사를 통보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별다른 감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음

특히 감찰 이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은 부당한 감찰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추장관의 무법폭주에 법조계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고, 전국의 법학 교수들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1개 지청의 평검사 전체 99% 검사 즉 대한민국 평검사 전원이 집단성명을 내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들까지 성명을 냈습니다.

평검사만 아니라 일선 지청장과 대검 간부들도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던 조남관 차장까지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의 측근 일부만 제외한,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체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어 추장관의 직무정지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으며, 이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이성운 중앙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검사까지 항의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관실에 파견되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검찰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려서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지만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한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전직 검사장 34명도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도 추 장관의 행동을 비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은사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의 전부가 추 장관의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기어이 비정상적인 검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징계청구권자가 징계구성원도 다 구성하고, 기피대상인데 기피도 하지 않고, 부하가 상사를 징계하는 그런 징계위원회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 훼손도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여당 의원을 무더기 입각시켰습니다. 출범 직후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현역의원은 5명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현직 여당 의원을 총선전에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도 문제인데, 내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 주무 부처인 행안부장관에 대통령 최측근을 앉혔습니다. 전해철 후보자가 누구입니까. 소위 3철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4.15 총선이 끝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역시 아무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엄격히 선거 중립을 지켜도 부족한 마당에 최측근을 앉힌 것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를 한 모든 것이 수사대상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손에 칼이 있다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것은 조폭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추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칼춤에 넋더리가 났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짓이기에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훗날 반드시 수사와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지난 9월 22일은 대한민국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비극적인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했는데도, 북한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이번 사건을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을 발견한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한 지 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북한군에 피격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당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해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을 때도 불참하고, NSC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불참한 채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무원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전에는(11월20일)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민감한 개인 신상에 대한 수사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들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심정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이 아버지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비참하게 피격당하는 그 순간을 모두 지켜보고 보고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호를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당까지 합세하여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피격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밀어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월권입니다.

국가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 만큼 억울한 죽음이 또 있겠습니까?

국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숨을 하늘같이 지켜야 합니다. 더구나 공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낙인찍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어느 국민이라도 북한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도 버림받고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을 이 정권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탈원전 및 월성원전 불법 조기폐쇄>

다음으로 무모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계 최고수준의 APR1400 원전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한 국민이 5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6일,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세계수준의 원전 준공식은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를 건립하는데 총 7조 5,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가사업이 첫출발을 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준공식은 나라의 큰 행사였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울진 3호기 준공식에 참석해 원전건설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신울진 원전(현 신한울) 1·2호기 기공식에 참석해 원전건설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역대로 원전 준공식에는 언제나 대통령이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씁쓸함만이 있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돼 우리 원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차세대 원전 APR(Advanced Power Reator) 기술의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어 13년만에 그 결실을 맺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홀대 받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원전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원이 끊겨도 3일간 버틸 수 있고, 10만년 당 1회라는 노심 용융 사고 확률을 100만년 당 1회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얼마 전에는 APR1400모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설계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프랑스, 중국조차 실패한 것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홍보조차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두 눈을 부릅뜨고 탈원전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 등 5개국 뿐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은 원전 기술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보다 유리하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사업자가 선정되는 체코 원자력 발전소 사업 수주를 위해 체코 장관에 직접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바로 며칠 전인 이 달 7일에는 한국전력이 '중장기 경영목표'보고서에서 2023년 사우디 원전 계약 추진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2024년까지 사업권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500조원의 원전 신규시장을 버리고 20조원에 불과한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자가당착 아닙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수출을 중단하고 자동차폐차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과학계 원로 13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로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산처럼 쌓였으니, 대통령이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12.19)

대통령이 탈원전 아집만 버리면 국가적 자해는 즉각 중단될 것입니다.

□ 월성 1호기 불법 7,000억원 매물

우리와 기술이 비슷한 미국 원전 수명은 한국의 2.5배나 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당초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던 것을 2002년 20년 연장해 가동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98기의 가동 원전 가운데 90기의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0년으로 추가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멀쩡히 잘 돌아가던 35년 된 월성 1호기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조기 폐쇄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수치조작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신청하고 5천925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협력금으로 1천47억원을 집행하는 등 수명 연장을 위해 7천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재가동 승인을 획득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가동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이유로 월성 원전을 중단시킨지 아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영뚱하게 경제성을 들고 나와 조기 폐쇄를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당초 한수원 의뢰로 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분석에는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경제성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산업부와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하여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회계법인에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처음에 수용하기를 거부했지만 끝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월성 1호기 평가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담당자가 “자신들의 보고서가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 버렸다.”며 한탄을 했겠습니까?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이러한 불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장의 지시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일요일 밤에 출근하여 중요한 문서 444개 파일을 삭제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합니다.

도대체 이 444개 파일이 무엇이길래 군사작전하듯 삭제를 시도한 것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복원된 324개 파일 중에서 2018년 5월에 작성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등 관련 보고서 10여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로 북한에 원전이라도 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원전이 그렇게 불안하다면서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한다면 북한인들 넉죽 받겠습니까?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지시하여 조직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그것도 한밤중에 대규모 증거인멸을 하는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불법성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 민주당과 이 정권이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검찰과 감사원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문으로 대통령의 명령이니 월성1호기 즉시 폐쇄하라고 명령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도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그 정책을 위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수사는 ‘정책’적인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지만, 설령 정책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도 여당은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4대강과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에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인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어떻든, 국민들은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이 모든 의혹들이 밝혀져야 합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서 뺏아가려는 시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고 핍박해서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원전 생태계의 붕괴

탈원전 정책은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 신규원전 6기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원전관련 업체들은 고사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 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이 물거품이 되고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을 찾아 뿔뿔이 흩어질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매는 정부가 알짜배기 원전 일자리를 걷어차고 있는 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인기 높던 대학의 원전 관련학과는 지원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 원전 관련학과에 지원하겠습니까?

대학뿐만 아닙니다. 울진에 있는 원자력 마이스터고의 인기도 시들합니다. 탈원전 상황에서 취업도 불확실한데 어느 누가 소신을 갖고 지원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원전 인재의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우리 원전 생태계가 그 뿌리 부터 허물어진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조차 없습니다.

상업용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영국의 경우 1990년 원전정책을 폐기한 지 10년만에 원전생태계가 철저히 붕괴되었고, 자체 기술로 건설이 불가능해져 원전을 수입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원전 생태계가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에 덧씌워진 이념은 지워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인구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총량도 세계 7위이다 보니,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악당'이란 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엔으로부터도 주요국에 비해 약하게 설정한 감축목표조차 달성치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 꼴입니다.

탈원전은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물론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 원전 없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태양광과 풍력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신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152GW(기가와트), 풍력 305GW(기가와트)로 총 450GW(기가와트)가 넘는 설비용량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3.2GW(기가와트)이므로 지금보다 35배 늘려야 하는 규모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하루 평균 3시간 또는 6시간 정도만 가동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시간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0년간 매년 지금 있는 설비만큼 증설해도 부족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계획으로 보이십니까?

현재로서는, 원자력만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탈(脫)원전’을 외치던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는데도 이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이고,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영국도 2030년까지 원전 12기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가 원자력에 달려 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을 하더라도 앞으로 수십 년은 원전이 계속 기둥이 돼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말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만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면서, 환경 문제로 법석을 떨면서도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0’에 가까운 원전만은 안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심지어 정부가 친환경이라 주장하는 LNG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강산성 성분 등 막대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자료에서는 ‘LNG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PM1~10 사이가 대부분이기에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언론에 알려진 발암물질 배출 사례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인 탈원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탈원전은 60년 후에나 완성될 장기 과제라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겠습니까?

지난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 했던 발언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가 남아 돈다. 해외 국가들 원전 스스로 짓기 때문에 원전을 수입할 나라가 없다. 사우디 정도만 수입해 짓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계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의 도래로 전 세계 전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산업 발전 방향에 따라 전기 소비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제18차 세계지식포럼, 2017년).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가 충분하니 괜찮다는 말이 어떻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탄소 제로를 외치면서도 탄소배출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7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삼척화력 1, 2호기, 신서천 화력, 하이화력 1, 2호기). 화력발전소를 믿고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205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0%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때에 임박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전기 부족이 가시화되면 이미 늦습니다.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발전소를 하나 짓는 데는 수 년이 걸립니다. 부족한 전기는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국제 유가, 에너지 수출 국가의 정책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는 안보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백신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주장할 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허겁지겁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니까?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김여정이 하명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발전에관한법률) 등 정권유지와 북한 눈치보기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것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19입니다.

어제(12.13 집계기준)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누적확진자도 4만 3천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도 58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K-방역이라 자화자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파탄을 넘어 빈사상태가 되었지만 제대로된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못한 것부터 마스크 대란에 정치방역 논란, 이제는 백신 문제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권유지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대답이라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초기대응 실패 - 중국발 입국자 입국제한 조치 했어야

지난 1월 20일 확진판정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19 환자는 19일 우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때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지금쯤 대한민국은 코로나 청정국이 되어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난 1월말부터 의사협회는 한달 사이 일곱 번이나 입국제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① 1월 26일 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의협은 처음으로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판단’이라 폄훼하며 “너무 심각한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② 1월 30일, 의협은 두 번째 담화문에서도 효과적인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편의 단계적 제한 및 중단조치와 같은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③ 2월 1일,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나자 의협은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또는 중단과 검역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월 2일 뒤늦게 입국제한 조치를 했지만, 중국 전역이 아닌 후베이 성 주민과 2주 안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혀 실효성 없는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④ 2월 4일, 의협은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중국 전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차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⑤ 2월 6일, 의협은 이미 1차방역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중국으로부터의 전면 입국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2월 12일에는 확진자가 28명까지 늘어났지만,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행사, 축제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다음날인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습니다.

⑥ 2월 18일, 의협은 한번 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 되는 지금이 입국 제한으로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2월 20일 국내 감염자 수가 급증하여 104명에 이르렀고 전날인 19일에는 첫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대통령 내외는 짜파구리 파티를 즐기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2월 21일 박능후 장관은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방역을 하는 건 창문 열고 모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비판에 대해,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다고 보단 겨울이라 모기가 없는 것 같다”고 농담조의 발언으로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습니다.

같은 날 박 장관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국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며 오히려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⑦ 2월 24일, 의협은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월 25일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 후 “대구·경북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여 ‘중국인은 막지 않고 대구·경북을 코로나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 모두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중국 눈치만 보다 벌어진 결과들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의사협회에서 7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담화를 내고 정부에 요청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눈에는 중국발 입국자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무장관인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코로나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돌린 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2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건의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가’라는 정갑윤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의학적 관점에서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면서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월 2일 대한감염학회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감염) 사례 40%는 후베이성 이외 중국지역이므로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입국자를 제한하는 위험지역을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고집으로 결국은 중국에서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라도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면 대구 지역 대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결국 오락가락 고무줄 방역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주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까지 몰려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는 자화자찬을 했지만 한 달 만에 실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선방하는 나라들인 대만과 베트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일일 확진자가 1,030명까지 치솟았지만 대만은 3명, 베트남은 2명에 그쳤습니다.

12월 3일 기준으로 인구 2,383만명의 대만은 686명 확진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구 9,770만명의 베트남도 1,361명 확진에 35명만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128만명의 인구에 3만 5,703명 확진, 529명 사망이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고무줄 방역이 아닌 초기부터 원칙에 따른 방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입국제한 정책, 선제적 진단 검사 등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의사협회가,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만 정부는 방역성과를 바탕으로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지난 달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29년만에 중국 본토 성장률(2%로 추정)을 앞설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역시 2.6%의 탄탄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는 베트남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올해 아세안(ASEAN) 국가 중 명목 GDP 4위에 오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국민이 500명을 넘어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응급실과 병상 미비로 인해 평소라면 치유되셨을 분들도 여러 분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수백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초기대응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반드시 직접 사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 마스크 대란

마스크 대란은 또 어떻습니까?

1월 29일(확진자 4명), 식약처는 “KF94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며 재사용은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확진자 16명),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는 제약이 있다, 수술·보건용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스크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쇼핑몰에는 1장에 2만원하는 KF94 마스크도 등장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마스크 관련 불만상담이 폭주했고, 대부분이 마스크를 주문했지만 주문이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월 5일 정은경 본부장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KF80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F80 마스크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2월 24일, 이의경 식약처장은, “새로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 한달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재사용을 금한다”는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WHO의 방침 역시 마스크 재사용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사용이 안 되던 마스크가 느닷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스크 부족으로 나빠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쳐도 되는 것입니까?

2월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의 대표는 “1~2월 사이에 마스크 6~7억개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후에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일제히 말을 바꿉니다.

3월 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마스크 한 개로 3일씩 쓰는데 큰 지장없다”고 국민 속을 뒤집었습니다.

이날 보도에 의하면, 마스크를 못 구해서 부천에서 김포에 있는 우체국까지 넘어와서 오전 6시부터 줄을 선 국민도 있었습니다. 판매시작은 오전 11시로 5시간을 기다려야 마스크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저도 물량이 부족해 줄만 서있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했었습니다.

3월 3일 식약처는 새로운 마스크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건조한 후 재사용해도 되고 감염 우려가 적을 땐 면 마스크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3월 5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장, 지정된 요일에 구매하기 위해 온 국민이 새벽부터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사실상 배급제나 다름없는 불편함을 세계 경제 10대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겪게 된 것입니다.

3월 6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마스크가 모자라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3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저부터 면마스크 사용하겠다. 시민의식 발휘해 달라”며 면마스크 사용이 시민의식과 관련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3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장관은 또 한번 막말로 국민의 의료진과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코로나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보호장비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의료계에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고 했습니다.

이미 의료계는 현장에서 마스크 등 장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외과에서는 마스크 부족으로 수술할 때도 면마스크 착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마스크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실정이고, 다 쓴 마스크마저도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 보관하고 있다고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사람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감사를 표해도 모자랄 판에 마스크 부족의 책임을 의료진에 전가하고, 의료진을 폄하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4월 27일, 1회 구매량은 3장으로 늘어났고, 6월 1일 드디어 5부제가 폐지되었습니다. 7월 12일에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공적마스크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3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4달이 걸렸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현지에서 이미 마스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12월부터 미리 준비했다면, 2월부터 시작된 마스크 대란은 없었을 것이고 3월부터는 안정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나중에라도 이러한 정책실패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반성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정치방역 논란

광복절 시점부터는 코로나 방역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역의 책임이 명백히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방역실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광복절 및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8월의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12일 처음으로 50명을 넘었고 14일 103명을 시점으로 매일 세자리 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2일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고 14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이트에 의하면, 코로나19 잠복기는 1~14일이고 평균 4~7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12일부터 역산해 보면 감염이 발생한 시기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 사이가 되고, 평균값으로 계산할 경우 8월 5일부터 8일 사이가 됩니다.

100명을 넘어선 8월 14일부터 역산한다 해도, 7월 29일부터 8월 13일, 평균의 경우 8월 7일부터 10일에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대략 7월말부터 8월 초순까지인데, 이 시기에 감염이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입니다.

정부는 7월 24일부터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8월 14일부터 쓸 수 있는 외식·공연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명백히 국민들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결국 그 직후 휴가철이 겹치면서 이 시기에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야 말았습니다.

8월 14일 신규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자 정은경 본부장은 주말과 대체공휴일에 ‘외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가족과 집에서 머물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의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여행 주간(10월)’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 주무장관도 해서는 안 될 발표를 방역 주무장관이 하다니 정말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틀 전인 8월 12일에는 문체부가 이미 영화, 공연, 숙박 등 할인쿠폰 6종 발행계획을 발표했었고, 나흘간 할인쿠폰으로 영화를 본 시민들만 50여만명(49만 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명백한 정부의 방역실패인 것입니다.

당시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식당에 모이지 말라는 게 기본방역원칙인데 모여서 밥먹으라 권장하니 국민은 코로나가 끝나가니 나가 놀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면, 잠복기를 고려하여 8월20일 이후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해야 하는데, 당시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20일 전이나 그 이후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당 역시 반대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감염병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고려대 김우주 교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 때문’이며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8월 25일 국회에 출석하여 제한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책임회피와 마녀사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소모임을 허용하고 외식·공연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더 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개천절 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방역에 방해가 되고 코로나 확산에 위협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추석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밀집하여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기간(26일~1일)동안 제주도 관광객은 일평균 3만 3,700명이었습니다. 제주공항의 밀집도가 광화문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설악산은 추석 당일 하루 입장객이 2만 1,000여명에 달했습니다.

개천절 당일 건대 먹자골목의 일부 고깃집과 술집은 자리가 꽉 차서 대기인원이 생길만큼 성황이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열차,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이나, 쇼핑몰,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들만 생각해도, 당시 총리의 발언은 방역을 위한 발언이 아닌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시민단체들마저 ‘차량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건 과잉대응’, ‘감염병 확산 방지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에는 추석연휴 귀성과 성묘를 자제해 달라 해놓고 여당 대표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여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외교부 수장의 남편은 버젓이 ‘요트 구매’를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11월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광화문 시위 주동자들을 ‘살인자’라고까지 지칭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국민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은 어떻습니까?

봉하마을을 찾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야기 나누는 이낙연 대표도 있었습니다.

굳이 직접 방문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많은 인파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에게 초대 질병관리청장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떠합니까?

이것이 정치방역이 아니면 무엇이 정치방역입니까?

□ 신속진단 키트

우리당은 정기국회 전부터 꾸준히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확진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이니 도입할 수 없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속진단키트는 PCR에 비해 정확도가 심하게 떨어지지 않으며, 가격이 PCR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시간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장점이 많은 검사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당의 주장은 신속진단키트만으로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PCR 방식과 병행하자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숨어있는 감염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도입을 이야기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마자 수도권 선별진료소에 신속진단키트를 배치했습니다.

이제라도 도입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빨리 추진했다면 더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현재 상황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9일 현재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44개 제품이지만,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신속진단키트는 2개 제품 뿐입니다. 이마저도 11월에 허가를 받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다가 12월 들어서야 임시선별진료소에 보급된 것입니다.

해당 제품의 하루 생산 가능량은 항원키트가 150만개, 항체키트가 30만개로 180만개가 가능하지만, 11월 허가 이후 국내 배포된 물량은 항원 56만개, 항체 10만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왕에 사용하기로 했으니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백신 확보 문제

내년도 국가별 경제상황은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빨리 확보해서 접종을 마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중간도 가기 힘들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4,4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중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직 미국 FDA 승인이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1,000만명분 정도이고, 나머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백신은 ‘확보’의 개념일 뿐 계약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예방률에 있어서도 아스트라제네카는 70% 남짓, 화이자나 모더나의 것은 90~95%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밀린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영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백신을 조기 확보하고 곧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2~3월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난 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애드리안 힐 제너 연구소장은 “FDA가 임상시험이 끝나길 기다리면 내년 중반이 돼야 미국에서 백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FDA가 승인하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 식약처가 1~2월 사이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임상 3상을 먼저 시작했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이를 승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정식으로 '계약'되어 있었다라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우리는 겨우 '선구매 약관'을 맺은 정도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계약'한 엄청난 물량부터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계약을 체결한들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저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4,400만명 분의 코로나 백신을 정말로 확보했다면 백신 문제는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정부발표 하루 뒤에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라, 접종계획을 앞당겨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인데, 이는 스스로 백신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은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곧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유례없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부산은 이미 병상이 부족해서 지난달 30일 20명의 환자를 시작으로 대구로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 경기도에서는 확진자 6명이 300km 떨어진 목포까지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1만 치료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병원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동안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또한 병상을 자발적으로 제공해도 제대로된 보상이 없는데 누가 선뜻 내놓겠습니까?

정 대책이 없으면 장충체육관이라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오늘(14일)부터는 현장 역학조사 인력 부족으로 특전사 간부 362명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도 그렇지만 의료현장에서도 이제 인력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체력이 고갈되고 정신적으로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런 위급한 와중에 이 정권은 무슨 자신감인지 시급하지도 않은 공공병원 설립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2,700여명의 학생들이 의사고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국가고시를 늦게라도 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건의마저 묵살해 버렸습니다. 국가적 상황이나 의료진 부족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감히 우리에게 맞서다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듯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진행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이었지만 모든 책임을 오롯이 의료계와 학생들에게 지우는 뻔뻔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1,000명을 넘어 2,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긴장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이 정권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입니까?

오로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처장을 앉히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5개 항을 촉구합니다.

1. 대통령은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 현재 정부주도의 K방역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소수의 편향적 친문 전문가들이 아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촉구한다.
3.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병상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4. 보여주기식이 아닌 선제적 코로나 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5.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여 2,700여명의 신규의사가 면허증을 받아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

□ 부동산 불안에 따른 전세시장 정책 급선회가 다시 불안을 불러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소유 임대인은) 다주택자라는 시각이 아니라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는 관점에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민간임대 부문을 공공이 개입하는 영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이 발언은 ‘다주택자는 부도덕한 투기꾼’이라 치부하는 지금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당시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은 세제지원과 장기임대보장조건을 함께 제시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갱신청구와 임대료 규제를 관철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임대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행태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식 소셜 하우스(social housing) 모델을 본딴 이 방향이 우리 부동산 시장 토양에 잘 착근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이 방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 고심한 시도라는 것은 인정할만합니다.

그런데도 전세시장이 지금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정권 초기 천명했던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장에서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고 나서더니 세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것이라며 임대시장 청사진도 전격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날치기 통과된 임대차3법의 내용은 점진성과 자발성이라는 정책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전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와 임대료상한을 전면적으로 강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혼란에 임시방편 미봉책으로만 대응하면서 정책의 밑그림이 뭉치 도대체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서 ‘청사진도 일관된 전략도 없는 정부정책이 시장혼란보다 더 무서우니 가만히 좀 계셔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 다주택자가 원흉?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물 썰 틈 없는 공급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필사적으로 회피해왔습니다.

그 대신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이고 이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52% 급등의 주범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증과세하면 이들이 매물을 쏟아내 아파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키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 됩니다.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 2020.7.2.)
- “세금 폭탄은 다주택자에 한정된 일”(홍남기 부총리, 2020.7.28.)
-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세제변화의 취지(홍남기 부총리, 2020.8.20.)”
-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 세력 때문”
(김현미 국토부장관, 2020.6.23.)

정말 대다수 실수요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다주택자, 소위 투기 세력만으로 가격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어디에 얼마큼 분포하는지를 알아야 정책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 임대등록된 서울 주택 중 아파트는 17.7%일 뿐, 대부분은 다가구, 오피스텔 등입니다.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아파트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다주택자의 부담만 늘리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다른 노력은 뒷전을 돌려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임대차법의 문제점

임대차3법은 세입자에게 2년을 더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임대료는 계약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 2가지입니다. 첫째 소급적용입니다. 시장충격을 고려해 대비할 기간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세입자에게 선심을 얻어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두번째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의 축소입니다. 우리나라 만의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서서히 축소되고 있었는데, 이 법으로 그것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키게 됐습니다. 전세 제도를 압박하는 강력한 힘을 시장에 장착한 것입니다.

당장의 시장 혼란도 클 것입니다.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의 윤리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계산이 맞을까요?

현재 많은 사람이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예전처럼 사회계층이 간단치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을 적대시하는 순간 임대시장은 위축돼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2차 대전 이후 주택 부족에 시달리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많은 실험을 했던 선진국들에서 증명된 바입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폭격과 임대료 통제라는 말은 그간의 역사에서 예외없이 증명돼왔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시장에 충격을 줘서 그 임차인들이 갈 곳 없게 만들지 않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순간 이런 정책은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도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지요.

백번 양보해서, 이법을 만든 사람이 무식했을 뿐 의도는 정말 좋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복잡한 임대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심의과정에서 잘 따져보고 지혜를 모았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사와 시장의 복잡함에 영향을 주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과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 유례없는 집값 폭등에 전세와 월세마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산산조각낸 것도 모자라 13평 공공임대에 4인가족이 살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58%나 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아파트값 상승률 보다 4.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3년 3.3㎡당 2,103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현재 4,156만원으로 2배가 꺾충 뛰어 오른 것입니다.

각 정부의 집권초기와 말기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8%, 박근혜 정부에서는 +25%였던 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그 수치가 +58%에 달하고 있어 집값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히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도대체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에서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지 이념에 집착하면 아무리 이념이 강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장악>

심지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조차 코드인사로 장악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법관 경력도 없고 법원행정 경험도 없는, 단지 특정 정치 성향이라는 점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법원 서열 60위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임명할 때부터 사법부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질에서나 경력에서 사법부 수장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자 역시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청와대의 사법부 장악에 앞장서 왔습니다.

감지덕지하게 벼락 출세한 사람은 보은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결초보은하려다 자신도 망치고 조직도 무너뜨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우리법연구회 회원 5명을 법원행정처 요직에 임명하는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하면서 코드 판사들로 사법부의 권력을 채워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코드가 비슷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정권코드에 맞게 법원행정처와 주요보직에 코드판사들을 배치한 후 판사 인사권을 행사하여 사법부전체가 정권과 비슷한 색깔을 갖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가장 우선된 책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법원장은 오히려 청와대의 하부기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판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이른바 ‘사법부 적폐청산’을 요구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사법부 수장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굴욕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판사를 협박하는 청원을 법원에 전달할 때도 그랬고,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사에게 민주당이 협박을 할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원되기까지 하면서 이젠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한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사람이 판사직을 그만 둔지 하루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그 비서관이 법제처장으로 영전하여 갔습니다.

청와대는 그 후임으로 똑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출신을 임명했습니다. 같은 성향의 법원 연구회 출신끼리 법무비서관 바통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코드가 이토록 잘 맞아 돌아가는게 말이 됩니까.

검사조차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마당에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금지규정을 두지 않았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1명 중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과 같은 특정 성향 단체 출신로 채워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서 비서관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두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① 대법원 구성 현황

이름	출신	임기	인선주체
김명수	판사 *우리법연구회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2023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박상욱	판사	2021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기택	판사	2021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재형	교수	2022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재연	판사	2023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박정화	판사 *우리법연구회	2023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안철상	판사	2024년 1월	문재인 대통령
민유숙	판사	2024년 1월	문재인 대통령
김선수	변호사 *민변 회장	2024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이동원	판사	2024년 8월	문재인 대통령
노정희	판사 *우리법연구회	2024년 8월	문재인 대통령
김상환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2024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노태악	판사	2026년 3월	문재인 대통령
이흥구	판사 *우리법연구회	2026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이러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11월 21일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내놓은 판결이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시종일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진보성향 대법관 전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여권에서 임명한 7명 중 5명이 역시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성향 단체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입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세월호참사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회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이고,

김기영 헌법재판관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② 헌법재판소 구성 현황

이름	출신	임기	인선주체
유남석(62)	판사 *우리법연구회	2023년 11월	문재인대통령
이선애(52)	변호사	2323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석태(66)	변호사 *민변	2024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이은애(53)	판사	2024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김기영(51)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2024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종석(58)	판사	2024년 10월	자유한국당
이영진(58)	판사	2024년 10월	바른미래당
문형배(54)	판사 *우리법연구회	2025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이미선(49)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2025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이들 역시 지난 겨울 국회에서 무법적으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철저히 진영논리에 충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해 청와대는 구성원들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것이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상은 대통령의 코드와 맞는 인물들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인사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조차도 청와대 출장소로 변질되었다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게 우리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드인사·이념편향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법

의 전영역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의 법무법인에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일한 것외엔 별반 공직경험도 없었던 사람(김외숙)을 법제처장에 앉히더니 인사수석비서관까지 시켰습니다.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사람(김형연)을 청와대법무비서관으로 데려와 쓰더니 지난해 5월에는 다시 법제처장 자리까지 내 주었습니다. 김형연 처장은 판사 시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며 사법독립을 주장했던 대표적이 사람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삼권분립조차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법조직까지 대선승리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의와 공정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는 더 노골적으로 안하무인입니다.

지난해에는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의 말을 잘 듣지 않자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장악을 시도하더니,

올해는 아예 노무현 정부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던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찰총장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서 사사건건 검찰총장을 핍박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악행의 정점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라 불리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부실수사로 덮어버렸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며 국민을 조롱했지만 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했어야 마땅합니다.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한명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법무부 장관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전임 법무부차관과 검찰차장부터 검찰 구성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반대하고, 심지어 친여성향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모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그렇게 지켜온 법치주의를 끝내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윤 총장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갑자기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탈원전 수사까지 진행되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를 남발하며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특정이념, 특정정치세력에 장악되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됩니다.

<문제많은 수사 및 재판>

수사와 판결의 기준은 ‘법과 양심’입니다. 법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는 믿음, 그게 바로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검찰, 우리 재판부는 어떻습니까?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총장 축출시도를 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를 기준 삼아 포퓰리즘 재판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의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드루킹 사건

지난 대선 당시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검색어와 댓글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은 당초 서울경찰청이 부실, 축소 수사로 진실이 은폐, 축소, 증거인멸될 위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한 결과, 겨우 특검이 도입되고 나서야 그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9년 1월 30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6일 2심에서는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되었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벌써 1년째 뚜렷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드루킹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

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의도적 지연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②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시키고, 현직 울산시장인 김기현 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직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비롯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울산지방검찰청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며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송인택 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자기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켰습니다. 지난 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잇선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나서서 송철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청와대의 8개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의 8개 부서를 움직인 그 사람을 수사해야 국민들의 의혹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문 정권에서도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모하여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표적감사를 벌여 공직자들을 자리에서 쫓아 내었습니다.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공공기관의 직위를 사유화 한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정권 블랙리스트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사실입니다.

권력의 비리만 들춰내면 무조건 쫓아내는 것입니다.

④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다던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청와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역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재수 전 국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무마만 해 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 수석전문위원회, 부산 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비리혐의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뒤를 봐주며 감싼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중단은 인정하지만 정무적 판단이기에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사실상 검찰과 법원을 협박했습니다.

올해 5월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고, 핵심 증언이 확보되었지만 아직까지 검찰의 구형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피의자 조국 전 장관은 보란 듯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조직적으로 경제성을 조작하고 내부 문건을 폐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7,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한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중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산업부 공무원이 구속된 후인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소신’은 정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법원에 가이드 라인이라도 주는 것입니까?

이 정권의 뻔뻔함이 어디까지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⑥ 이재명 재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대체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와 소극적인 허위사실공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판결입니다.

대법관들은 이재명 지사를 7:5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합의 구조상 대법원장은 다수에 가담하게 돼 있으므로, 1명의 대법관이 더 반대했더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선무효형을 받고 그 직에서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⑦ 은수미 재판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조직폭력배로부터 약 1년간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판결입니다.

⑧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이 두 번 영전시킨 동부지검장의 명백한 ‘봐주기 수사’ 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는커녕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만 부추겼을 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 서씨 휴가 연장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드러났고, 추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이 휴가에 관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대검 차장검사는 “핵심 참고인인 지원장교 진술의 번복 경위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지만, 서울동부지검에서 결론이 안 바뀔 것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렇

수 없습니다. 누가봐도 봐주기 수사, 답이 정해진 수사였습니다.

⑨ 윤미향, 박원순, 오거돈 사건

정의연 윤미향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의 죄명으로 지난 9월 14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7일 폭로한 이후 지지부진한 수사 끝에 지난 9월 14일이 되어서야 기소됐던 것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은 지난 4월23일 폭로된 이후 아직도 기소가 되지 않은 채 수사중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는 사이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여가부장관의 실언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진실은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를 수록 더 힘을 키워 세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문제 많은 법안 처리(공수처법 등)>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도 채 안 되었지만 여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무기로 문제 많은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법안 때문에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수십건의 문제 많은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임대차 3법의 경우 이미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거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당 관계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 4. 26. 박주민 의원

“저희들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은 야당이 추천하는 두 명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후보 선정에 있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 식으로 추천된 공수처장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9. 4. 29.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

“공수처장도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97차 최고위)

19. 10. 15. 강병원 의원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국당이 공수처를 장기집권사령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KBS1 시사건건)

19. 10. 17. 송기헌 의원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못한다. 인사추천위가 총 7명, 야당 추천이 2명인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이) 결정될 수 있다”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19. 12. 27. 설훈 의원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한 몸이 된듯하다. 공수처는 중립적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반부패 수사기구다. 공수처장후보는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알면서도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왕국’ 등 사실 무근의 표현을 써가며 공수처법안에 흠집을 내려는 것은 끝까지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 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33차 확대간부회의)

19. 12. 27. 박주민 의원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는 달리 국회에서 세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고 그런데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절대적 비토권이 있어요.”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19. 12. 31. 이재정 의원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추천된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야당에 절대적 비토권을 가진, 사실상 야당과 합의해서 추천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JTBC 아침&)

20. 6. 29. 박범계 의원

“7명 중에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 되는 것이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공수처장 취임) 이) 택도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로 오해한다.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 7. 1.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 이것은 야당이 동의를 안하면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야당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 7. 2. 이해찬 당시 당대표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거슬 지시. 민변 등 특정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서울경제 보도)

* 다음날인 7월 3일 민주당에서 안내문자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이랬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처리했습니다.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 관련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후속법안을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보도된 YTN이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국민 54.2%가 잘못됐다고 하고, 잘됐다는 여론은 39.6%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만 봐도 문제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법독재, 반법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1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민사찰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한은 경찰로 이관하면서 조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준수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조사권을 이유로 현행 수사인력을 유지하고 경찰로 이관하지 않아, 경찰은 새로운 수사인력을 확보해야 해 수사인력만 두배로 확대되는 기형적 법안입니다.

이미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하게 되면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이 다시 재결합되게 됩니다.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이전의 이유로 국내정보와 수사 분리를 내세운 것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사찰이 가능한 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5.18왜곡처벌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타 범죄의 법정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천안함왜곡처벌법에 대해 “역사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을 달리 판단한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5.18을 직접 겪었던 최진석 교수가 “5.18을 왜곡한다”는 글을 통해 5.18왜곡처벌법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 울분을 토했겠습니까. 그는 이 글을 두고 “나는 5.18을 왜곡한다고 쓰고,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저주했다. 나는 5.18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을 폄훼한다. 나는 5.18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고, 그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싶은 소망으로 썼다.”고 설명합니다.

법으로 지키는 것이 5.18을 더 살리는 길이나, 아니면 법으로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 5.18을 더 살리는 길이나에서 법으로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5.18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12월 11일 최진석 교수 페이스북 페이지 게재문

<나는 5.18을 왜곡한다.>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

1980년 5월 18일에 다시 태어난 적 있는 나는

지금 5.18을 그때 5.18의 슬픈 눈으로

왜곡하고 폄훼한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죽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포획된 5.18을 나는 저주한다.

그 잘난 5.18들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

금남로, 전일빌딩, 전남도청, 카톨릭센터,

너릿재의 5.18은 죽었다.

자유 5.18은 끝났다.

민주 5.18은 길을 잃었다.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

꿈에도 몰랐다.

나는 속았다.

3.1, 4.19. 6.10,

부마항쟁의 자유로운 님들께

동학교도들의 겸손한 님들께

천안함 형제들의 원한에

미안하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자유를 가둔

5.18을 저주한다.

그들만의 5.18을 폄훼한다.

갇힌 5.18을 왜곡한다.

5.18이 법에 갇히다니.

자유 5.18이

민주 5.18이

감옥에 갇히다니

그들만의 5.18을 저주한다.
이제 나는 5.18을 떠난다.
5.18이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죽어라, 그러면 산다.
나는 5.18을 지키러 5.18을 폄훼한다.
그날처럼 피울음 삼키며
나는 죽는다.
5.18아 배불리 먹고
최소 20년은 권세를 누리거라
부귀영화에 빠지거라
기념탑도 세계 최고 높이로 더 크게 세우고
유공자도 더 많이 만들어라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
5.18 너만 홀로 더욱 빛나거라.
나는 떠난다.
내 5.18 속에서 나 혼자 살린다.
나는 운다.
5.18역사왜곡처벌법에
21살의 내 5.18은 뺏기기 싫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되어도 부족한 법안들이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날치기 처리되는 우
리 국회의 현실,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떳떳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4강 외교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김정은 눈치보느라 북한선원 2명을 강제북송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탄압이라는 지탄을 받더니, 올해는 지난 9월 발생한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한국이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는 2년 연속으로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정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비판하더니 유독 북한 인권문제만 성역으로 남겨둔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지지를 얻고 진정성을 인정받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대한민국의 국격만 훼손시킬 뿐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전통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일본과의 3각군사협력 관계는 갈수록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소미아 파기 소동으로 국론은 분열됐고 남은 건 안보약화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미국이 조율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미국 국무부와 군의 고위관리들이 총 출동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데 이어 미 상원은 결의안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로 주한 미군이 위협해 지고 미 국가 안보에 직접 피해를 줄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기 철회는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이순신 장군의 열두척 배와 동학 농민군의 죽창가까지 외치며

반일 감정을 선동하더니 일본에게 국장급 수준의 수출규제 협의만을 얻어 낸 채 결국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라는 사실상 백기를 들고야 말았습니다. 외교적 대참사였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뭉개질대로 뭉개졌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큰소리도 빈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일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갑자기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문재인-스가 공동선언’까지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반일을 넘어 극일까지 주장하다 하루 아침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그림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기승전북한으로 이어지는 외교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동맹 역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9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란 발언에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반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수혁 주미대사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70년 전에 미국을 택했다고 또 해야 하나’는 발언으로 한바탕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일본과 틈을 벌리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중국에는 비굴할 정도로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약속해줬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작 경제 보복은 풀지도 못한채 우리 안보 전략만 손발이 묶인 비정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주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은 전시(戰時)나 마찬가지로 제 발에 족쇄를 채우는 이런 합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우리를 방어할 무기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사드배치 또는 미국 MD 참여 여부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왜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드는 핵 없는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무기임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지금까지 내정간섭을 하며 주권까지 침해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김정은에 이어 중국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까지 우리의 영공을 노골적으로 침범하면서도 우리에게 큰소리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소 닭 보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독도상공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3시간 동안이나 대치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마치 구한말에 있었던 청·일, 러·일 전쟁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

단으로 진입하여 30여분간 돌아다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이처럼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이 해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스스로를 방관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일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4강 대사들이 과연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장하성 주중 대사는 문재인 청와대 전 정책실장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이며 외교와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대통령께서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찾아 적소적 재하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북핵 관련>

문재인 정부(통일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시도했던 대북 쌀 5만톤 지원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결국 사업비용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봄에 다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에 왜 이렇게 쌀을 못 줘서 안달입니까? 우리가 쌀을 주면 북한정권이 그 쌀을 북한의 동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계약이 끝나자마자 아직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백신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만,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북한에 못 퍼줘서 안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직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민주화 이후 진보정권들은 북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북핵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오자 국민들을 향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햇볕정책의 이름아래 막대한 혈세를 대북지원에 퍼부었습니다. 정상 회담을 성사를 위한 4억 5천만 달러 송금,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지불, 개성공단 적극추진으로 북한에 들어간 외화마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핵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일리가 있다", "북핵은 협상용이며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라며 북핵을 옹호하기도 하였습니다.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지원으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차관형태로 식량, 철도·도로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였습니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적극 지원하였는데, 2012년 상환기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 되돌려 받았다는 소식조차 들은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간 김대중 -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이 우리 동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핵개발에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박근혜-이명박 정부때가 아닌 노무현 정부 때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 “북한 핵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2003년 1월)
-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없다.” (2004년 11월)
-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2004년 11월)
-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2005년 1월)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직후 2월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
- “북한 핵실험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2006년 9월)
 - * 며칠 뒤인 10월3일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 *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0월 9일 오전 10시35분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2006년 12월) 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북한을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습니다마는, 틀림없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햇볕정책을 고집했음에도 북한은 도발을 일삼고 핵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강경책 때문에 북이 핵을 개발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발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천문학적인 자금과 역대 물품을 지원하고도 북한은 도발을 끊임없이 강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발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진실에서 눈을 가리고 싶으시다면, 김대중 정부에서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겁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북한 도발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권이 명운을 걸었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거쳤음에도 미사일·핵폭탄 하나 없애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약속했던 실무회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코앞 창린도에서 해안포까지 쏘며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금강산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몽니를 부려도 달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3번에 걸쳐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도 3월에만 3번에 걸쳐 8발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우리 국군의 GP초소에 대한 북한군의 사격으로 GP 벽에 총탄자국이 남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6월에는 개성에 있는 우리 국가의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서해안 해안포문을 개방하고 대남확성기 설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탄에 희생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위협하는데도 항의 한번 못한 채 대북 지원만 계속 제시하며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태입니까.

북한이 기고만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삶은 소대가리” “소뿔 우에 닭알 썬을 궁리만 한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우리 정부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란 기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동은 타조가 자기 머리만 숨기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북한은 지키지도 않는 9·19남북군사합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감지할 손발을 셸프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9·19군사합의는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가 상호 정찰이 허용된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을 2년간 했었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찌될 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9·19남북군사합의는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부채 증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곶간이 바닥났다”.

당시 정부 부채는 35.7% 였음에도 문 대통령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40%의 근거가 뭐냐”고 되물으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 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국가 재정상황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36% 미만을 유지하던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40%를 훌쩍 넘어섰고, 문 대통령 임기 말에는 5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국가부채 증가율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 추이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143조 2천억원(7% 증가), 이명박 정부는 180조 8천억원(5.8% 증가), 박근혜 정부는 170조 4천억원(3.4% 증가) 늘어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과 4년 만에 296조원(11.3% 증가)이 늘어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입니다.

2017년 400조원 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28조, 2019년 469조, 2020년 512조로, 2021년 558조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당시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도 코로나 못지 않은 미증유의 국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공간을 함부로 허물지 않았습니다.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만 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2014년 11월 12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박근혜 정부는 부채로 성장을 떠받치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채주도성장은 결국 다음 정부에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정책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3분기말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6%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라면 다음 정부는 물론 우리 자식 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국민께 드리는 호소>

□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공작,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강변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있습니다. 180석이라는 국회 의석을, 자신들에게 ‘의회 독재’를 허용한 요술방망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불법·탈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사탕발림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헛바닥처럼 움직일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시행도 하지 않는 ‘공수처법’을 며칠 전 강행처리했습니다. 우리 당의 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을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 문재인 정권,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 직시해야

부끄러움을 아는 민주당이 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선출권을 빼앗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했다고 환호작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지금 권력에 취해, 자신들이 벼랑 끝에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초심은 문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국민에게 웅변으로 호소했던 대통령 취임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취임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랐던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그대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제일 앞자리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하나였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관저에 스스로 유폐되는 권위주의 대통령은 되지 말라. 박근혜 정부보다 좀 더 나은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60% 이상을 넘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면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동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모든 대통령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70%, 80%라는 국민적 지지 속에 출범한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의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 소통하겠다고 약속, 어디에 갔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최고 권력자,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지켜본 문 대통령

은 서민의 대통령이라기보다, 마키아벨리스트에 가까운 정치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얼마나 유능한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다정하고 이웃같은 대통령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 정의와 공정의 가치 저버리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패거리 문화’, ‘우리끼리 문화’가 청와대와 집권세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눈앞에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 광경들입니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른다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권력의 비리만 들추면, 검찰총장이든 검사장이든 야차같이 달려들어 괴롭혔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대통령의 원팔과 오른팔을 함께 한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선거여론 조작 사건…

경찰은 감추고,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사법부는 ‘내편무죄 네편유죄’

판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게 당신이 약속한 공정한 나라 입니까?

□ 국민의 신뢰 없이 나라의 존립 보장할 수 없어

한 칼럼니스트는 오늘자 신문 논평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독재의 유혹에 빠진다. 민주적으로 집권한 정권들이 법적 장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징후가 있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둘째 경쟁자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셋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넷째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국회 의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의 퇴임 후는 경호실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퇴임 대통령의 안전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의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랍니다.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필리버스터도 이제 정권의 무력 앞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당 일방의 표결로 우리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됩니다. 여당의 폭주를 규탄하는 우리의 절규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저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